

박근혜의 가장 큰 적폐는 박근혜 정부다 (바로 황교안 내각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2, 3면

퇴진 운동에 턱없이
부족한 민주당의
입법 과제

5면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미중 갈등

8면

조류 인플루엔자:
최악의 재앙으로 만든
황교안 내각

6면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세계 정세 분석

4면

‘하나의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4~5면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노동 개악 추진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열이 이어졌다.

박근혜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낀 황교안은 살짝 몸을 낮춰 국회 대정부질문에 총리 자격으로 출석했다. “전례가 없다”던 오만한 태도에서 조금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황교안의 박근혜 대항이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전히 희망 섞인 관측일 뿐이다. 황교안은 12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겉모습만 바뀐 박근혜처럼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1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국무위원들은 안보 태세 강화, 경제 회생, 민생, 국민 안전 등 산적한 과제들을 빈틈없이 수행해 달라.”

박근혜를 방어하는 데도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3년 8개월 동안 해 왔던 일들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보인 황교안의 태도를 보면 ‘박근혜의 독선과 오기까지 대항’한다는 지적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를 몸소 겪고도



박근혜의 공범이 권력을 휘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황교안은 오히려 “사드 배치가 이미 늦었다는 전문가도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하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협정도 재론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독선과 오기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데, 공개된 현장 검토본을 보면 진일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히 박정희를 미화한 부분이 대폭 늘어났다. 이 병철·정주영·유일한 등 기업주들을 영웅시하고 노동자들의 저항과 5·18 광주 항쟁은 폄하했다. 이 때문에 전교

조 교사들은 물론 비교적 온건한 역사학자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12월 21일 까지 제출된 의견만 2천5백11건이나 된다.

그러나 황교안은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주장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버텼다. “주무부처[교육부] 장관의 판단이 우선이지만 총리로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내 일각의 후퇴 움직임도 단속했다.

겉으로만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할 뿐, 이 뻔뻔한 자는 이제나저제나 반격의 계기만 찾고 있다. 황교안은 촛불 집회에서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석

방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내란 선동을 한 부분을 용인하라는 듯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온갖 부풀리기와 마녀사냥 끝에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구속해 억울한 옥살이를 9년이나 하도록 만들었다. 황교안은 대정부질문에서 뜬금없이 직파 간첩 검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황교안은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한철은 황교안과 마찬가지로公安검사 출신에 박근혜가 직접 현재소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문제는 박한철이 헌

법재판관으로 일하다가 현재소장으로 임명됐는데 황교안은 현재소장 임명부터 새로 6년을 적용해 사실상 임기를 연장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한철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월 이후에 분위기를 봐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자를 끌어내리기는커녕 선거적 득실을 따져 눈치를 보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황교안에게 시간을 벌여 주고 있는 셈이다. 황교안은 국민의당과의 면담이 성사되자 역겹게도 “협치의 시작”이라며 반색했다.

박근혜를 확실히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공범 황교안을 끌어내려야 한다.

장호중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때는 직접 성주로 내려가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다가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분노한 주민들을 피해 도망쳐 나와야 했다.(사진) 그 뒤로도 황교안은 사드 반대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괴담은 중범죄’라고 공격했다.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 직후부터 “군건한 안보 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위안부’ 합의도 변경하지



지난 7월 황교안은 성주까지 내려가 사드 배치를 옹호하다가 성주 군민들에게 수모를 당했다.

않고 유지한다고 공언하면서 말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자,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대외 정책이 바뀔 것을 우려해 왔다. 주한미군사령

관과 백악관 대변인이 잇달아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일본도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잘 유지될지 걱정한다.

황교안 내각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

키려 재빠르게 움직였다.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고, 국방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예정보다 이른 내년 5월(자신들의 계산으로는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황교안 내각은 또한 트럼프 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어, 12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을 만나게 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은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대북 정보 공조’를 강조했다. 트럼프 측과 황교안 내각이 국내 사드 반대 여론과 주류 야당들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처럼 황교안 내각은 미국 제국주의에 편승해 한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지향을 적극 실행해 온 ‘몸통’이다. 이 내각 구성원들의 주도로, 12·28 ‘위안부’ 합의 1년 만에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한 한일 군사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

5월에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 자들은 어떻게든 위험한 정책들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친제국주의 문제에서 주류 야당들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불과 두 달 전에는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때 문재인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까닭이다. 문재인은 지지층과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시국에 이재명이 ‘시한부 배치론’을 제시하며 사드 배치에서 후퇴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황교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공상적인 요구로는 부족하다. 친제국주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황교안 내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래로부터 운동을 심화·확대해야 한다.

김영익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김문성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

12월 16일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답변서 일부다. 박근혜는 거대한 박근혜 퇴진 여론을 또다시 바보 취급했다.

다른 일당도 대장을 잘 따랐다. 재판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핵심 실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잡아땀다.

이들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박근혜 현재 심리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을 연계해 시간을 끌어 보려 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고 형사재판의 사실 다름에 종속돼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해고제, 성과 연봉제를 강요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쫓겨날 때가 되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몰려나라고 하면 되냐고 한다. 이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박근혜가 뻔뻔한 답을 내놓는 것은 시간 끌기뿐 아니라, 자신의 우익 지지층에게 현재를 압박할 논리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11월부터 우익 기독교 세력과 접촉해 대형 기도회 등을 촉구했다는 의혹을 <CBS>가 폭로했다. 17일에 현재 앞에서 집회를 연 박사모 등 우익 동원에 돈이 살포되고 있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나왔다.

따라서 정권 퇴진 운동이 현재에 조기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박근혜의 대타로 나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더러운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것도 부패의 양상)에 힘입어 출범했다. 우파 전체와 기업주들은 뽕뽕 뭉쳐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다.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인 걸 다 알면서도 꾀박 꾀박 더러운 돈을 입금했다. 심지어 값싼 아이를 말에 태워 명문대에 입학시키려고 수십억 원씩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고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 자체가 적폐다. 이 정부가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법과 질서’였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대중 운동으로부터 나온다 12월 17일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행진하고 있다.



운동을 민주당 집권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약하면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

다. 박근혜의 법치주의는 가진 자들에게서 못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특권과 횡포에 항변하지 못하게 때려잡는, 가진 자들의 주먹이다.

바로 이 법치주의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국무총리로서 떠받쳐 온 것이 황교안이다. 따라서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것도 그 자체로 박근혜의 적폐다. 퇴진 운동은 황교안과 장관들의 사퇴를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싸워야 한다. 야당(특히 민주당)과의 협력을 위해 이를 전면에 내세우길 꺼려서는 안 된다.

야당의 동요

박근혜가 시간을 끄는 동안 황교안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배치, 노동개약, 한일군사정보협정 등을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협치’를 하자며 야당과의 개별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공작 정치의 재탕이다. 법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현재소장 박한철의 임기 연장설을 흘린 것도 되지기 시점을 잡으려는 간 보기다. 지난 17일 서울 집회는 전과 달리 무장한 진압 경찰들이 경북 공역과 안국역 등에 전진 배치됐다.

지배계급은 거의 수직으로 솟구쳐 오른 대중 투쟁에 놀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는 박근혜 개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듯 보인다. 그런 혼

란과 당혹감 속에서도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점이 있다. 대부분 노동계급 성원인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힘에 대한 자기 확신을 유지하고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폭발적인 거리 시위는 (바라는 바를 아직 충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등장 두 달 만에 파국지세로 박근혜의 공식적인 직무정지와 집권당의 분당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제는 곳곳에서 제동을 걸려 한다.

지배계급이 우파 언론을 통해 박근혜 개인의 치부는 계속 폭로하면서도 야당들에 황교안 내각의 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대통령과는 달리 황교안은 야당 의원수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한데도(총리는 과반이면 탄핵소추 가능) 공식 야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황교안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주문한다. 주류 야당도 자본주의 수호 원칙은 새누리당과 공유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자본가 계급에 국정 수습 능력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공식 야당들에게는 우파들과 타협해 공정한 대선 관리 내각이 돼 주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할 것이다.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조율할 시간도 필요하니, 대체로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시계가 더 빨라지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을 수 있다.

야당과의 공조가 우선돼선 안 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번 정점을 찍은 뒤로, 운동 초기에 있었던 지배계급의 부분적 용인이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이 운동에도 정치적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박근혜 개인만을 제거하길 원하는 자들과 박근혜 정권을 제거하길 원하는 더 급진적인 자들 사이의 분화 말이다.

엔지오들은 민주당의 개혁파 정치인들을 밀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자신들 고유의 프로젝트 때문이라도 운동이 이제는 민주당(특히 박원순) 대선 승리의 보조물로 가기를 바라는 듯하다. 운동이 더 자신감을 얻고 급진적이 되는 것은 민주당(심지어 박원순)에게도 불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야당들과 계급을 초월한 국민 연합 정권에 참여하길 바라는 자민통계는 거리 운동을 강조하면서도, 야당 비판을 삼가고 그들과 동맹하길 바라는 점에서는 엔지오들과 보조를 맞춘다.

정의당도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느라 말을 아끼고 있다. 황교안 사퇴 요구와도 분명한 선을 긋고, 정략적 개헌 논의를 내놓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려 한 국민의당을 비판한 정의당 전북도당을 중앙당이 견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레디앙>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한 의원은 전북도당에 “굳이 이 국면에서 이렇게(국민의당과 대립하는 것을 뜻함) 해야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민중의 힘

그러나 진보정치세력이나 노동운동이 한사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운다는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그 수호자들로 하여금 가져없는 착취자·억압자가 되라고 압박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이므로, 진보세력이 포함된 민주당 정부조차 고통자가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배계급의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박근혜의 권력

농단이 현행 헌법 상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벌어졌다고 하지만, 같은 헌법 아래서 노무현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무기력을 호소하고 지지층을 배신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진보 세력이 그 정부 안에 머물려고 하면, 투쟁 대상에 대한 정치적 혼란을 줘 노동자·민중이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데에 해가 된다.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안에서 이런 전략은 ‘운동의 성공을 위해 야당 지지가 필요하니, 운동의 요구와 수위를 낮추자’는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첫째, 꼭 온건한 주장이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처럼, 박근혜 개인뿐 아니라 그의 정부에 증오심을 갖고 불만과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에서는 투쟁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 강력한 거리 운동이 (역풍론 걱정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과감하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기치로 탄생했듯이 말이다. 조직 노동운동과 좌파가 이를 처음에 제한해 성공을 거둔 배경이다.

둘째, 대중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는 정책은 패배를 자초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퇴진 운동의 동력인 거대한 분노와 자신감을 운동이 온전히 표현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가라앉고 그렇게 될수록 주류 야당들조차 운동의 요구에 냉담해질 것이다.

벌써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퇴진행동의 온건파들이 야당들을 압박하려고 22일 국회에서 연 “6대 긴급 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에 주류 야당 지도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최측은 야2당의 원내대표들이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 냈다. 운동을 민주당의 집권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대신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며 대중 투쟁 중심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힘을 극대화해야 한다.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세월호를 의식한 요구는 “대통령 일정 공개 의무화” 정도인데, 이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다시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에 한참 못 미친다. 민주당은 2014년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누더기 특별법을 여당과 야합해 통과시키고,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요구도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회피했다. 그레 놓고는 이번에도 유가족과 운동의 요구를 누락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말하지만 정작 집회·시위의 자유 문제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는 “입법 과제”에서 빠져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권력으로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망 문제로 처벌받은 책임자가 전혀 없는데 이 문제도 빠져 있다. 토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석방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진보당 해산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시민혁명 입법인가?

노동자들의 삶도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활동인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 광화문에서 희생자들의 구명 조끼를 입는 유가족들.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철저히 외면했다.

구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할 노동개혁,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 강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중단은 민생 현안이 아니란 말인가?

황교안 내각 인정?

그나마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는 포함됐다. 그러나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요구한다. 이 정책들은 한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들로 제국주의적

군사경쟁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민주당이 “일방적”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들을 합의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뜻할 뿐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적폐 청산 주장이 도통 미덥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박근혜의 최대 적폐인 황교안 내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수장 구실을 하

면서 사드 조기 배치 등을 강행하고 있고, 성과연봉제도 강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를 야당에게 요구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등 박근혜가 수년 동안 공들인 민영화 추진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우파들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으로 황교안마저 물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박근혜 탄핵 후 선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이런 보수적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 과제 중 언론장악방지만이 민주당의 입법 과제에 거의 고스란히 포함됐는데, 이는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을 중시하는 이해관계도 맞물린 탓이 클 것이다.)

선거 중시

민주당은 지금의 촛불 운동을 “혁명”이라 부르지만 이 운동이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 속 개혁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정부질의회에서 황교안에게 호통을 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황교안 사퇴 요구는 한사코 지지하지 않는 것도 이런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벌인 무능·무책임 정책들, 소수 권력자들만을 위한 술한 개악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이런 과제는 끊임없이 동요하고 운동에 언제나 뒤쳐지는 기회주의의 민주당이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적폐 청산의 주요 통로로 삼으려 하면,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부르주아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일부까지 운동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운동을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열쇠다.

김지윤

4면에서 이어짐

심이익의 하나로 꼽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는 했지만 대만을 자국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을 중요한 전략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두지 않고 군사적 지원도 유지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양안관계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지난 수년간 미중 갈등이 점증해 온데 이어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재고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 양안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다. 따라서 먼저 트럼프의 주장과 행보에 반대해야 한다. 즉, 양안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중국 정부의 주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이면에는 한쪽 제국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수많은 소수민족을 중국에 강제로 묶어 두고 지배하기 위해 중국 지배자들은 이 원칙을 내세웠다.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만에게 강요하고 심지어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한다. 심지어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 사용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종의 사회주의의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국주의의 강화에 일조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 압력에 맞서 민족자결권은 옹호돼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대만은 중간 규모의 산업국이자 미국 제국주의의 파트너이다.

대만 독립 문제는, 미국 제국주의가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독립 선언은 미국이나 대만이 중국에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공산마저 있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 선언 그 자체가 진보적이지는 않다. 민진당 차이잉원처럼 자신의 통치 명분을 세우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만 운동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과 대만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세력이 다 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체로 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일이나 대만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는 태도가 될 것이다.

양안관계에서 두 국가가 통일하든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든 양국의 노동자 대중이 얻을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양안관계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통일 또는 독립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지향 속에서 양안의 노동자 대중이 단결을 추구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이정구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 사육마리의 숫자가 12월 23일까지 2천4백20만 3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14년에도 약 6개월에 걸쳐 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발생 한 달 만에 그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피해는 주로 산란계에 집중됐다. 살처분 된 산란계(산란용)는 1천4백51만 3천 마리다. 국내에선 육계(고기용)를 더 많이 키우지만 살처분 된 육계는 61만 3천 마리에 그쳤다. 산란계와 육계의 피해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육계는 사료 공급이 자동화되어 있으면 사람이나 차량과 접촉이 적다. 그러나 산란계는 계란을 꺼내기 위해 수시로 차량과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방역에 더 취약하다.

육계와 산란계의 피해 차이를 보더라도 차량과 사람에 대한 방역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파를 막는 중요한 요인을 알 수 있다. 사전에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만 구축해 놓았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소독약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역대 최대의 재앙을 만들고 말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1~5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을 전



달걀 대란으로 이어지는 AI 대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황교안 정부 때문에 달걀까지 못 먹게 생겼다.

수 조사해 27개 품목에 대해 효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검역본부가 해당 품목에 대해 출고 중단, 판매 중지, 기존 제품 회수를 지시했지만, “회수 조치가 전혀 되지 않거나 극히 미흡”했다.(축산 생산자 단체가 발병 전인 10월 검역본부에 발송한 공문)

결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15일 기준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농가 1백78곳 중 1백56곳이

부적합한 소독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천4백만 마리를 살처분한 뒤에도 소독약 관리가 거의 안 된 것이다. 이 정부가 방역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 준다.

11월 11일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11월 16일 농가에서도 확인된 뒤에도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정부의 부패를 감추는 데 골몰하느라 ‘골든 타임’을 놓쳤다. (더 자세한

내용은 190호 기사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황교안 정부’를 참고하십시오.)

황교안은 23일 조류 인플루엔자 일일 점검 회의에서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가 더 필요하다”며 “빈틈 없고 철저한 선제적 방역”을 특별 주문했다고 한다. 완전한 뒷북 조치들에 저런 수식어를 붙이는 뻔뻔함은 박근

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떠올리게 한다.

우려했던 대로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은 달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당장 멈추더라도 병아리가 자라 첫 계란을 낳는데 6개월이 걸린다. 확산이 멈출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면 계란 공급 문제는 장기화될 것이 뻔하고 결국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변이될 경우 사람에도 감염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총 1천7백22명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7백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감에 걸린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도 걸리면 변종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정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장 종사자와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 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의 책임자들인 박근혜-황교안 정부를 청와대에서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에게 더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

김무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수의학과 학생

부산지하철

지하철 안전을 위한 파업

12월 20일부터 부산지하철노조는 부분 파업을 전체 필괄 파업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 3천여 명 중 2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열차 운행은 출퇴근 시간에는 1백 퍼센트 운영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70퍼센트 수준으로 운영돼 열차 간격이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내년 4월에 새로 개통되는 다대선에 신규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백97명(기술 78명, 역무 65명, 승무 28명, 차량 26명) 이상은 충원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고작 6명만 정규직으로, 70명은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채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기존 노동자 1백 명가량을 전환배치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노동시간도 늘어난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측의 안대로 한 역에 역무원 두 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잠시 다른 데로 가면 혼자서 근무해야 합니다.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호선은 더 심합니다. 아예 혼자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건지.”



박근혜의 위기 속에서 파업에 나서다 파업 중에 부산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가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

노동조건 악화는 지하철 안전 위험과도 연결돼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지하철이 운영되면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능력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입만 열면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부산시장 서병수는 위선적이게도 기간제 일자리를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한다. 그러나 부산지하철노조의 요구대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부산시의 최악의 실업률을 그

나타 낮추는 방법이다.

비정규직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발생할 임금 인상분도 모두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포기하려고 종용하는 사측에 노동자들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는 통상임금 1심 소송 승소 이후, 임금 인상분으로 인력을 충원해 노동시

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사측은 소송을 계속 끌며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온갖 구조조정 압박을 노동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압박 때문에 노조가 통상임금 승소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양보할 테니 인력을 늘리라는 상당한 양보안을 내놓았는데도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사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노동자들 역시 더는 양보할 수 없

다고 여기는 상황이므로 파업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성과연봉제 시행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사측은 아직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지만, 이사회는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사측의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 추진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맞선 투쟁도 계속 벌여나가야 한다.

최근 부산지하철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한 대책위도 만들어졌다. ‘생명, 안전, 고용을 위한 다대선 부산 시민대책위’가 결성돼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고 있다.

12월 26일부터는 부산지하철 24개 전 역사에서 파업 노동자 전체가 참가하는 노성이 시작되는데, 대책위는 이 거점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홍보전, 연대 집회 등을 할 계획이다.

고무적이게도 그동안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 수천 명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의 파업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산지하철 파업은 부산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을 심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희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기념일을 맞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음악회가 열렸는데 무려 25만 명이 참가했다. 대만 인구는 약 2천3백만 명이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혼인평권(婚姻平權) 운동'이라고 부른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은 46.3퍼센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45.4퍼센트다. 40대 이하 청년층의 65퍼센트는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집권당인 민진당을 비롯해 대만의 3대 정당이 각각 혼인평권초안을 제출했다.(대만에서는 민법(民法)에 혼인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혼인평권초안'은 민법 일부를 수정하는 초안(개정안)을 뜻한다.) 그중 민진당과 국민당의 초안이 11월 초 입법원(한국의 국회에 해당) 제1독회를 통과했다.(제1독회는 한국의 상임위원회 의결과 비슷한 절차다.)

3대 정당이 제출한 혼인평권초안 중 민진당이 제출한 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혼인은 쌍방(현재 민법 규정: 남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번에 처음 추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공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것임에는 틀림없다.

민진당 총통 차이잉원은 2016년 1월 대선 당시 자신의 SNS에 "사랑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혼인평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마 많은 동성애자들이 차이잉원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차이잉원 당선 후 동성애 운동 단체는 다시 적극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10월 혼인평권초안이 입법원에 제출돼 11월 초 제1독회를 통과한 것은 10월 29일 8만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동성결혼 합법화 시위('대만동성대행진')가 열린 직후였고 운동의 성과였다. 물론 아직 사법·법제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고, 제2독회와 제3독회를 통과해야 법안이 성립(개정)된다.

반(反)동성애 단체의 혐오와 차별

11월 17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가 심사 절차에 들어가자 반(反)동성애 단체들이 심사를 중단시키려고 2만 명을 동원해 입법원을 포위했다. 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다수당 민진당은 이런 압력을 받아 심사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연 후 한 조항씩 심사하기로 타협해 버렸다.

11월 2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혼인평권 공청회가 열렸다. 반(反)동성애 단체·인사들은 혐오·차별 발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전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도로에 점자 블록을 깔 것인가? 이만한 사회적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 "동성애는 이성애의 정지, 역제, 퇴화 상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동성결혼 반대 측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족 윤리, 성교육, 에이즈 전파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



대만 인구 1백 명 당 한 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인파가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집회로 쏟아져 나왔다.

장한다.

동성결혼 지지 측은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에 동성결혼을 응원하는 페이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페이지들은 단시간에 지지자들을 수만 명 모았다.

현실 세계에서 동성결혼 지지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지지 단체인 '혼인평권 작은 꿀벌(婚姻平權小蜜蜂)'은 "나는 혼인평권을 지지한다. 혼인평권이란 무엇인가? 문제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애에 관한 질문에 답한다. '혼인평권 작은 꿀벌'은 벌써 2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확보했다.

12월 26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서 혼인평권초안이 실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동성애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상세한 소식이 담긴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왕야왕(王雅芳)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는 끝내 거부됐다.

왜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북남미 몇몇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동성결혼은커녕 시민결합 같은 제도도 도입된 나라가 거의 없다. 이번에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이 꽤 된다니 정말 기쁜 일이다.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은 금지돼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 법원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관행상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였다.

'정상 가족' 환상

이성 커플과 달리 동성 커플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일상 생활에서 여러 차별을 경험한다. "의료보험도 같이 안 되고 부부 소득공제도 못 받고, 우리는 모범시민이 예요, 세금은 두 배, 권리는 절반"이라는 김승환 씨의 자조 섞인 말은 많은

동성 커플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 준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임에도, 파트너가 아파서 입원을 해도 보호자로서 간병을 할 수도 없고, 연금을 이어받을 수도, 장례 절차에서 의견을 낼 권한도 없다.

법원은 '관행'을 핑계 댔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빠르게 변해 왔다. 2001년 한국 껄껄 설문조사에서 동성결혼 찬성은 17퍼센트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35퍼센트로 증가했다. 비슷한 조사를 한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은 이 변화가 젊은 층에서는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2010년 20대, 30대의 동성결혼 지지 비율(30.5퍼센트, 20.7퍼센트)이 2014년에는 두 배로 늘었다(60.2퍼센트, 40.4퍼센트).

법원까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건, 결혼·가족이 단지 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제도로서 더 큰 사회적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족은 아이를 기르고, 노인을 부양하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재충전하는 공간이다. 많은 노동자들도 가족을 무정한 세계의 안식처라고 여겨 지키려 하지만, 지배계급에게도 노동계급 가족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필요 때문에 국가와 보수주의자들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이성애 가족만을 '정상적' 가족으로 보이게끔 애쓰다.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개별 가

족에 양육·돌봄 부담을 떠넘기고, 이성애 가족만을 '정상'으로 여기며, 결혼·가족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는 것을 반대한다.

오늘날 '정상 가족'은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27.2퍼센트로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혼은 그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중 1명꼴로 크게 늘었다(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결혼과 양육을 미화하며 결혼하라고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에선 LGBT+들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와 가족을 결성할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애자 커플들에게 인정되는 결혼이 LGBT+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LGBT+가 쟁취해야 할 다른 법적 권리(군대 내 동성애 처벌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들과 함께 중요한 요구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1년 만에 동성 부부가 기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많은 동성 커플이 결혼을 바라왔음을 보여 준다.

법적 평등은 천대받는 수많은 LGBT+의 자긍심을 높이고 LGBT+를 '별종' 취급하는 인식에 맞서기 훨씬 쉽게 할 것이다. 모든 억압과 천대에 반대하며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흠뻑 지지해야 한다.

양효영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가중되는 미·중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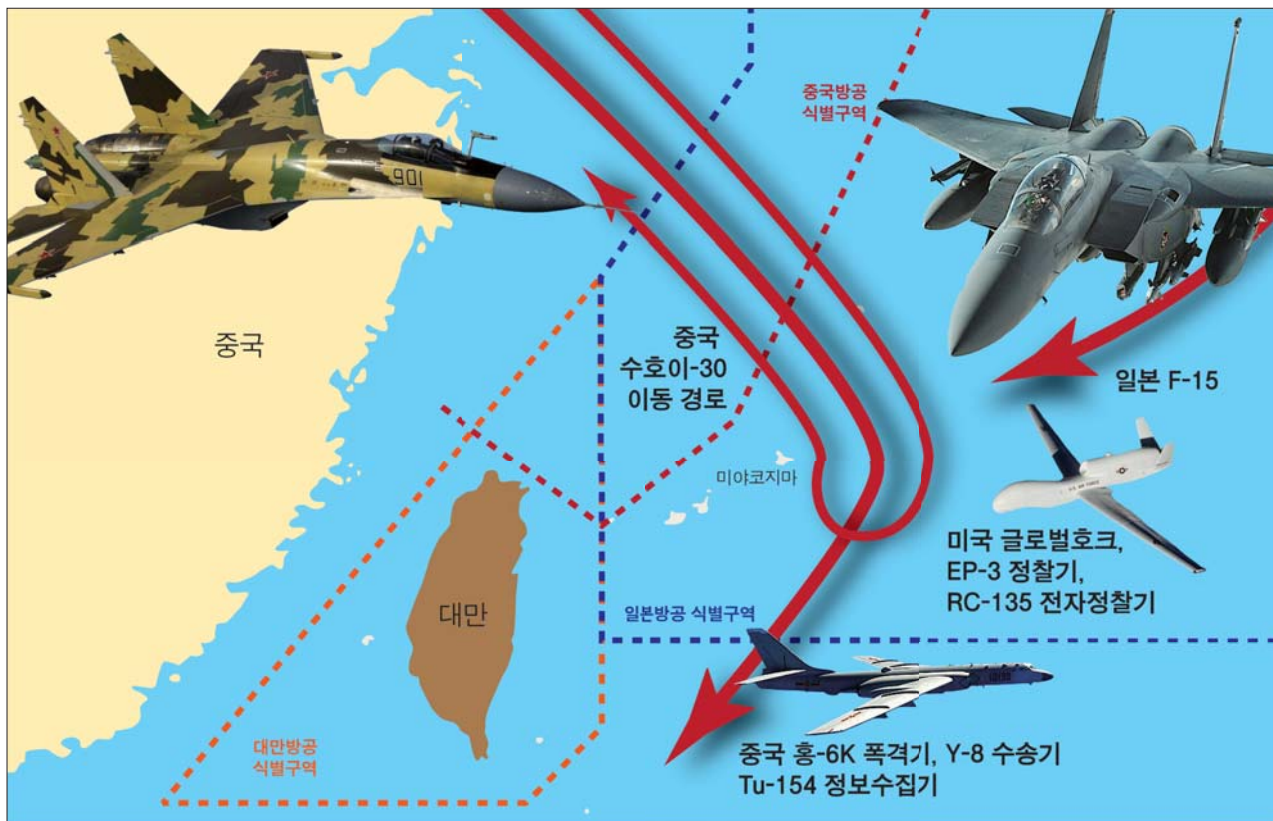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아시아에서 상징적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나포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황해 북쪽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다. 트럼프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 두라”며 으르렁거리며 맞대응했다.

18일에는 핵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중국 전략폭격기 홍-6K가 세 번째로 대만 상공을 비행했고, 이에 미국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출격, 일본 자위대는 F-15 출격으로 대응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때문에 미국이 패권적 대외 정책에서 후퇴할 것이라던 일각의 전망이 무색하게도, 열강의 전투기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인 대만 상공에서 조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호전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은 북한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속 동맹”이라 칭하며 대북 강경책을 공언했다. 22일 플린은 한국 외교 대표단을 만나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또, 국무부 부장관으로 거론되는 리처드 하스는 지난 12일 ‘세계 질서 2.0’이라는 글에서 “국가의 주권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대북] 선제 타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가 지미 카터 이래 37년의 관행을 깨고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과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이 맥락의 연장선이었다. (관련 기사: 본지 190호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통화 직후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역사적 전화 통화는 대(對) 중국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고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트럼프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 등에서 [미국에 유리한] 협약을 맺지 않는 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엄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레이건 이래 공화당 우파 일각도 1979년 민주당 카터 정부가 대소련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대만 인근 상공에서 조우하는 미·중·일 군용기들.

중국과 손잡으며 대만과 단교한 것을 “냉전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 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관련 기사 5면)

대선 기간부터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강경 기조를 공공연히 내세웠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슬로건 “힘을 통한 평화”를 내걸며 해군력 강화, 첨단 MD 구축, 군비 증강을 위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항 철폐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계 패권을 수호하겠다는 미국 지배자들의

강력한 의지(구체적 방식에서 이견은 있을지라도)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그간 경제적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제해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때부터 분명히 드러난 것이었다.

미국 대외 정책의 거두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 당선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은 트럼프의 최근 행보가 단지 트럼프 개인의 돌출적 선택만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상황이 미국 지배자들이 원하

는 대로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미국 지배자들이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인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 능력 약화 자체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엄청난 기회”?

미국은 2008년 대불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위기에서 회복하고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다.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에 불안정성의 안개가 짙게 끼는 것은,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무산 공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TPP를 추진할 때는, 아시아 시장을 미국 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척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중국이 경제적·지정학적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 모두를 노린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TPP를 무산시킨다면 지정학적으로 후퇴할 뿐 아니라 미

국 기업들도 손해를 볼 수 있어 미국 지배자 다수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TPP 무산을 주장한다고 신자유주의 전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유무역을 맹비난하면서 당선했지만, 반면 신자유주의의 다른 핵심 요소들인 법인세 감면, 금융·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은 당선 직후부터 적극 지지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금융가 등 지배자 일부는 ‘트럼프노믹스’로 미국 경제가 회복할 것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달러화 강세 등이 성장세를 둔화해 더한층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만만찮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대 중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를 내정하는 등, (TPP 없이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해 미국의 우위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 압박으로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갈마드는 갈등

이런 경제적 갈등이 지정학적 갈등과 점차 갈마들며 파장을 낼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그 불길한 전조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말하듯 미중 갈등이 즉각 전면적 충돌로 비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과장이다. 현재로서 미국의 패권은 지역 차원에서 도전 받는 정도고, 제1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근본적 공격을 감행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위안화 하락세를 저지하고자 자본 유출 막기에 급급한 중국 역시 미국의 패권에 근본적 도전장을 내밀 처지는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트럼프와 시진핑, 푸틴이 이끄는 “열강이 경합하는 시대”라 규정했다. 경합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같은 동맹국과 부담을 나눠지려 들 것이고, 그 때문에 한반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분명, 한국의 좌파들이 제국주의 체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선 저항의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다.

김준호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공언해 온 트럼프.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사회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천대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일간 신문에 없는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전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